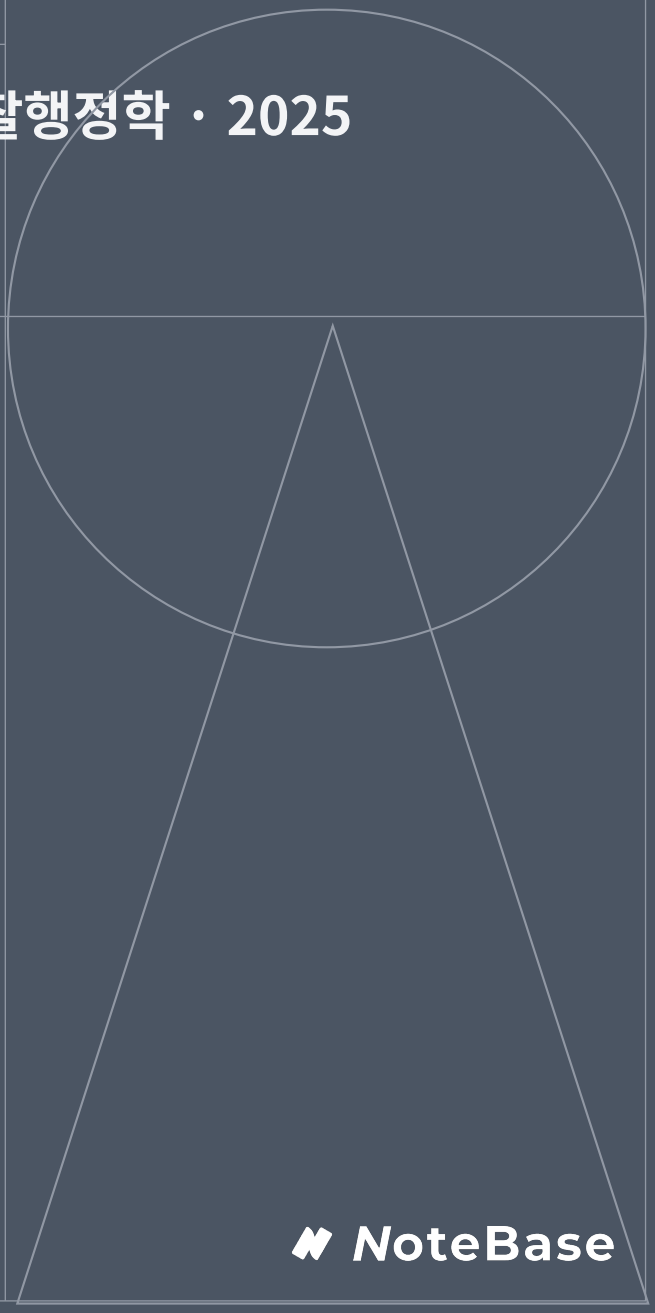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5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행정학 · 2025

문 1.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적 의사결정 상황의 전제로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제시한다.

② 인간은 원초적 상태에서 최대극소화의 원리에 바탕하여 규칙을 선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이다.

④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초적 상태에서는 최악의 처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최소극대화(maximin)**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극소화'는 이 기준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초적 상태는 공정한 정의 원리를 선택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이다. 무지의 베일은 자신의 계층·재산·능력 등을 모르게 하며,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이다.

② X: 롤스의 선택 기준은 **최소극대화(maximin)**이다. 각 대안의 최악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중 가장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자신이 어떤 지위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기준이므로, '최대극소화'를 '최소극대화'로 고쳐야 한다.

③ O: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원리이다. 각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와 양립해야 하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 없다.

④ O: 공정한 기회균등은 비슷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비슷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원리이다. 차등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요구한다. 두 원리가 충돌하면 **공정한 기회균등이 차등원리보다 우선**하므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기회를 정당화할 수 없다.

NoteBase

문 2.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Simon)은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확실성, 시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② 디징(P. 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③ 디징의 기술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④ 사이먼은 만족모형에서 인간을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경제인(economic man)으로 가정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만족모형의 인간관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행정인**이다. 경제인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인간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이먼은 인간이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지능력의 한계와 불확실한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자원의 제약 때문에 실제 의사결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② O: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경제적·법적·사회적·정치적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 경제적 합리성은 자원과 대안의 가치를 비교한 가치 극대화, 법적 합리성은 권리·의무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사회적 합리성은 구성원 사이의 통합과 연대, 정치적 합리성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적절성과 관련된다.

③ O: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다. 목표 자체의 바람직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④ X: 사이먼의 만족모형이 가정하는 인간은 경제인이 아니라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이다. 행정인은 정보와 인지능력 등의 제약을 인정하고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가 자신의 만족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경제인(economic man)은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관련 대안을 비교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을 경제인과 연결한 이 선지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3. 신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는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에 있다.

② 마리니(F. Marini)는 신행정학의 관점으로 현실 적합성 지향, 탈실증주의, 고객지향적인 조직 등을 제시하였다.

③ 왈도(D. Waldo)는 신행정학의 관점을 규범이론,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④ 일선 현장 관료들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보다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옹호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과 가치지향성**을 중시하며, 행정이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신관리주의와 경제학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방식과 경쟁·유인 등을 활용하여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신행정학은 가치중립적·기술적 행정관을 비판하고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 등 규범적 가치를 강조한다.

② O: 마리니는 현실 적합성, 탈실증주의, 고객에 대한 관심 등을 신행정학의 주요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현실 적합성은 행정이론이 실제 사회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이며, 탈실증주의는 사실의 관찰·측정만으로 행정을 설명하려는 한계를 비판하고 가치판단을 중시한다. 고객지향적인 조직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서비스의 영향**을 중심에 둔다.

③ O: 왈도는 신행정학이 규범이론과 사회적 관심, 행동주의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규범이론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사회적 타당성은 현실 사회문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행동주의는 사회문제 해결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뜻하며, 가치중립적 사실 분석을 강조하는 행태주의와 구별된다.

④ O: 신행정학은 행정이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일선 관료도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치지향적 태도를 옹호한다.

NoteBase

문 4.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을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경험으로 바라본다.

② 외면적 행태보다 내면적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위를 중시한다.

③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선입견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④ 객관화된 경험적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실증주의 입장을 옹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상학적 행정연구는 **행위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상호주관적 경험**을 중시한다. 객관화된 경험적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실증주의의 입장**을 현상학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현상학적 행정연구는 행정현상을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그들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① O: 사회현상은 사람들이 서로의 행위를 해석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상호주관성'은 개인의 고립된 주관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가 공유되고 이해되는 관계**를 뜻한다.

② O: 겉으로 관찰되는 행동이 같더라도 행위자가 가진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외면적 행태의 관찰에 그치지 않고 **행위자의 의도와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③ O: '판단중지'는 당연하다고 여겨 온 전제나 선입견에 따른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미리 정한 틀을 적용하기보다 현상이 참여자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살피려 한다.

④ X: 객관화된 경험적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주의의 입장이다. 현상학적 행정연구는 **참여자의 경험과 행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하므로, 연구 대상을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다.

② 가외성의 예로 권력분립, 분권화 등이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 중시되는 행정가치이다.

④ 가외성의 요소로 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이 제시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신공공관리론은 비용 절감과 성과 향상을 위한 **능률성·경제성**을 중시한다. 가외성은 조직·기능에 중복이나 여유를 두어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가치이므로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강조 가치로 보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외성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는 여유 자원이나 중복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이나 장치에 오류가 생겨도 다른 부분이 이를 보완하여 **전체 체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② O: 권력분립과 분권화는 권한을 여러 기관이나 정부에 나누어 상호 견제·보완하게 한다. 하나의 기관에 모든 기능을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판단·통제 경로**를 두어 오류와 권한 남용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가외성의 예에 해당한다.

③ X: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성과 중심 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는 입장이므로 **능률성·경제성**을 중시한다. 가외성은 당장 비용이 더 들더라도 중복 기능이나 여유 자원을 유지하여 오류·기능 장애에 대비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대표적 행정가치로 연결하면 부적절하다.

④ O: 중첩성은 여러 기관의 기능이나 관할이 서로 겹치는 것이고,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동등잠재력은 주된 기능 수행 기관이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세 요소 모두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보완할 가능성을 높인다.

NoteBase

문 6. 넛지(nudge)이론을 활용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을 급진적 점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② 행동경제학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

③ 인간의 사고체계 중 시스템2는 시스템1과 달리 휴리스틱스(heuristics)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하며, 이로부터 행동적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④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넛지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에서 비롯되는 행동적 시장실패를 선택환경의 작은 변화로 완화한다. 이러한 개입을 실험·개선하며 축적해 큰 변화를 이루려는 접근이 **급진적 점증주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행동적 시장실패는 인지적 편향이나 자기통제의 한계 등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넛지는 기본값이나 정보 제시 방식처럼 선택환경의 작은 부분을 조정하여 이를 완화한다. 이러한 개입을 실험·개선하고 널리 축적하여 큰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급진적 점증주의**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② X: 행동경제학에 이론적 토대를 둔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정보 처리 능력과 주의력, 자기통제 등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넛지도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하여 선택환경을 설계한다.

③ X: 휴리스틱스에 따른 직관적 판단은 주로 **시스템1**과 관련된다. 시스템1은 빠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간편한 판단 규칙인 휴리스틱스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시스템2는 느리고 의식적인 숙고**를 통해 분석·계산하는 사고체계이다. 선지는 두 체계의 특성을 바꾸어 설명하였으며, 시스템1의 판단 편향 등은 행동적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X: 넛지는 **선택을 금지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선택지의 배열, 정보 제시 방식, 기본값 등 선택환경을 조정하되 다른 선택을 할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특정 선택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큰 금전적 보상·제재를 가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7. 공공선택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오스트롬(V. Ostrom)은 관료행정과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을 강조하며,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분권화된 적합한 조직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뮬러(D. Mueller)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 규정한 바 있다.
㉢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관료행태 등의 연구에 적용한다.
㉣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시장실패에 대한 주제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의 분석방법으로 정치·행정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며,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장실패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주된 초점은 **정부실패의 원인과 개선**에 있으므로 ㉣의 '이에 못지않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에 참여하는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학의 분석방법으로 집합적 의사결정과 제도의 작동을 설명한다.

㉠ O: 오스트롬은 관료의 전문성이나 선의만으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보지 않았다. 관료도 자기이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권력을 한 조직에 집중시키기보다 **여러 의사결정 중심으로 분산**하고 시민의 참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민주적 행정을 강조하였다.

㉡ O: 뷰러는 공공선택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비시장적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재화를 사고파는 선택이 아니라 투표, 정책 결정 등 정치·행정 영역의 집합적 선택을 뜻한다.

㉢ O: 공공선택론은 연구 대상은 국가·정치·행정에서, 분석방법은 경제학에서 가져온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효용 추구 등의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국가의 형성, 투표, 정당, 관료의 행태** 등을 설명한다.

㉣ X: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언제나 공익적으로 행동하여 시장실패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비판하고, 정치인·관료 등의 유인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정부실패의 원인과 개선**에 초점을 둔다. 시장실패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부실패 못지않게 시장실패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것이 주된 특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8.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참여자를 말한다.

② 정당은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과정을 평가한다.

③ 비공식적 참여자로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언론매체 등을 들 수 있다.

④ 의회의 골격입법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시킨다.

정답 2번

①

공식적 참여자의 구분 기준은 **헌법·법률에 따라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이다.
의회·행정부·대통령·사법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이다. 국회는 이러한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과정을 평가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익집단·시민사회단체·언론매체는 **이익 표출·여론 형성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④

골격입법은 의회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부에 맡기는 방식이다.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결정할 여지가 커지므로 **행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NoteBase

문 9.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스(C. Mills)는 지위(제도적)접근법, 헌터(F. Hunter)는 명성접근법을 통해 미국 사회의 엘리트이론을 탐구하였다.

② 달(R. Dahl)은 미국 뉴헤이븐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견하였다.

③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무의사결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④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달의 뉴헤이븐시 연구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엘리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밀스는 정치·경제·군사의 핵심 제도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를 분석하였다. 이는 **제도적 지위를 기준으로 권력자를 파악**하는 지위접근법이다. 헌터는 지역사회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였다.

② X: 달은 뉴헤이븐시의 구체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조사하여, 정책 영역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다르다는 다원주의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며,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도자와 엘리트가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졌음'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③ O: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이 실제로 내려진 결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배집단에 불리한 쟁점을 **정책의제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무의사결정은 단순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제도·절차 등을 통해 의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 행사이다.

④ O: 신다원주의는 여러 집단의 경쟁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집단이 정책과정에서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기업이 투자·생산·고용 등 경제활동을 좌우하므로 정부가 기업의 반응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한다.

NoteBase

문 10. 휴리스틱스(heuristics)와 판단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초기값의 편의와 조정의 불충분성으로 발생하는 판단 오류를 의미한다.

②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는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가 아닌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발생하는 판단 오류를 의미한다.

③ 사람들에게 'r'로 시작하는 영단어와 'r'이 세 번째 위치하는 영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라고 하면 전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실제로는 후자가 더 많음)는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④ 5초를 주고 A그룹에게는 '8×7×6×5×4×3×2×1', B그룹에게는 '1×2×3×4×5×6×7×8'의 결과치를 추정하게 하면 A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2,250)이 B그룹이 답한 수치의 평균값(512)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실제로는 40,320으로 동일함)는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의 예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초기값에서 출발해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는 판단은 대표성이 아니라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대상이 전형적인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휴리스틱스는 복잡한 판단을 간단한 단서에 의존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단서가 실제 확률이나 수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① X: 초기값을 기준으로 추정을 시작한 뒤 조정하지만 그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값에 치우치는 것은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스는 대상과 특정 범주의 전형 사이의 유사성으로 소속이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선지는 고착화와 조정의 설명에 대표성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므로 개념 연결이 잘못되었다.

② O: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는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기억에 잘 남거나 쉽게 회상되는 사건을 실제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지는 이러한 판단 오류가 생기는 기준을 설명한다.

③ O: 단어의 첫 글자를 단서로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세 번째 글자를 단서로 떠올리는 것보다 쉽다. 그 때문에 실제로는 r이 세 번째에 오는 단어가 더 많은데도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판단한다. **실제 빈도 대신 회상의 용이성**에 의존하므로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의 사례이다.

④: 고착화와 조정의 사례라는 분류와 통계 용어의 정확성을 구별해야 한다. 큰 수부터 곱하는 A그룹은 첫 몇 단계의 계산값이 크고, 작은 수부터 곱하는 B그룹은 작다. 5초 안에 전체 값을 추정하면서 초기 계산값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므로 A그룹의 추정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실제 곱은 순서와 관계없이 40,320이다. 다만 원문의 '평균값(2,250)'과 '평균값(512)'은 정확하지 않다. 해당 실험에서 보고된 두 수치는 각 집단 추정값의 **중앙값**이며, 산술평균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다. 평균은 값의 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고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놓이는 값이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은 ①이다. ①은 휴리스틱스의 종류 자체를 잘못 연결한 반면 ④는 고착화와 조정의 작동 원리를 보여 준다. 다만 인정 정답을 따르는 것과 ④의 통계 용어까지 정확하다고 보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1.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된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② 정책과정을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로 묘사하기도 한다.

③ 린드블롬(C.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의 정책을 설명하는 경험적 모형이지만,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④ 정책수단에 따라 정책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린드블롬은 점증주의를 현실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경험적 모형이면서, 인간의 능력과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할 **바람직한 규범적 모형**으로도 보았다. 따라서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은 그의 입장과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소수의 대안을 비교한다. 모든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을 결정한다.

② O: 린드블롬은 제한된 대안을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작은 수정을 거듭하는 정책결정 방식을 '진흙탕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로 설명하였다. 한 번의 포괄적 분석으로 최적안을 확정하기보다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이다.

③ X: 린드블롬은 점증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할 뿐 아니라, 복잡한 정책문제에서 **실제로 채택할 만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모든 대안과 결과를 검토하려는 합리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과 정보의 한계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점증주의에는 경험적 성격과 규범적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합리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점증적 정책결정을 옹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점증모형에서는 정책목표를 먼저 확정한 뒤 수단을 고르는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목표와 수단을 상호 조정**한다.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달성하려는 목표의 수준이나 우선순위도 수정될 수 있다.

NoteBase

문 12.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기상황에서의 시간 압박은 비공식적 의사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② 위기상황에서 관료정치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강해질 수 있다.

③ 위기 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의사결정, 즉흥적인 대응이 있다.

④ 던(W. Dunn)이 처음으로 제안한 집단사고(groupthink)는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의 편향을 초래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집단사고를 집단 의사결정의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체계화한 학자는 **제니스(I. L. Janis)**이다. 집단의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를 던의 이론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위기상황에서는 대응 시간이 짧아 정상적인 보고·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기 어렵다. 이에 소수 관계자의 긴급 협의나 비공식 연락을 통한 결정처럼 **공식 절차 밖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② O: 관료정치는 부처나 기관이 자신의 권한·이익·관점을 관철하려고 경쟁하고 협상하는 현상이다. 위기가 발생해도 **기관 간 이해관계가 곧바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할권과 대응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수 있다.

③ O: 심한 시간 압박과 불확실성은 정보 수집과 대안 비교를 어렵게 하여 분석적인 판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필요한 대응 결정을 회피하는 '무의사결정', 충분한 검토 없이 당장의 상황에 반응하는 '즉흥적인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④ X: 집단사고를 집단 의사결정 실패의 이론으로 체계화한 학자는 **던이 아니라 제니스(I. L. Janis)**이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합의 유지가 대안의 현실적·비판적 검토보다 우선되어 판단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타당하지만 학자 연결이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13. 정책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정책집행관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분리되고 정책집행에서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라 보았다.

② 현대적 정책집행관은 정책집행의 정치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위계적·단방향의 정책집행관을 탈피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③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J. Pressman & A. Wildavsky)는 오클랜드시의 실업자 구제사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여 집행 동기가 상실되었음을 지적하였다.

④ 하그로브(E. Hargrove)는 집행연구를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표현하며 집행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오클랜드 사업에서는 핵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집행의 연속성과 지지가 약화**된 것이 문제였다. 장기간 근무해서 집행 동기를 잃었다는 설명은 실패 원인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전적 정책집행관은 정책목표를 정하는 정치적 결정과 그 목표를 실행하는 행정적 집행을 분리하였다. 집행자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이므로, 집행 과정의 결정도 **기술적·관리적 판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인 과정이다.

② O: 현대적 정책집행관은 집행 과정에서도 참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과 재량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집행의 정치성을 인정한다. 또한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와 결과가 정책결정에 되돌아가 목표나 수단을 수정하므로 **결정과 집행이 상호작용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상부의 결정을 하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는 위계적·단방향적 관점에서 벗어난다.

③ X: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오클랜드 사업에서 지적한 문제는 핵심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 근무가 아니라 **잦은 교체에 따른 지도력의 단절**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던 인물이 바뀌면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약해져 추진의 연속성이 훼손되었다. 여러 기관과 참여자의 동의·조정을 거쳐야 하는 공동행동의 복잡성도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④ O: 하그로브는 정책결정과 실제 정책성과 사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던 집행 과정을 **잃어버린 고리**로 보았다. 정책을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결정된 정책이 실제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NoteBase

문 14.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기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정책과정과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둔다.
㉢ 정책하위체제 내에서는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복수의 정책옹호연합이 존재한다.
㉣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외부적 충격을 제시하며, 외부적 충격은 정책의제를 변경시킬 수 있으나 지배적인 옹호연합의 정책 핵심 요소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화를 이해하는 데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찰**을 중시한다. 외부적 충격은 정책의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적 연합의 정책핵심신념도 변화시킬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X: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념체계의 안정성과 정책지향적 학습의 누적 효과, 연합 간 관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므로 5년 정도의 중기기간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O: 기본 분석단위는 **특정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책하위체제**이다. 관련 공무원·의회 관계자·이익집단·연구자 등 다양한 참여자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주려고 상호작용하는 범위를 분석한다.

㉢ O: 정책하위체제의 참여자들은 신념체계, 특히 정책핵심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정책옹호연합을 구성하고 행동을 조정한다. **각 연합 내부의 신념 공유**가 결속의 바탕이 되며,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복수의 연합은 자기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경쟁한다.

㉣ X: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집권세력의 변화 같은 외부적 충격은 정책의제와 관심을 바꾸고, 연합 간 자원과 영향력의 분포를 재편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적 연합이 교체되거나 **지배적 연합의 정책핵심신념 일부가 변화**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 핵심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단정은 맞지 않는다. 다만 외부적 충격이 언제나 정책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옳은 보기는 ㉡과 ㉢이므로, 이 조합을 제시한 ③이 정답이다.

NoteBase

문 15.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본다.

②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대한 자원의존을 줄이기 위해 환경 자체를 바꾸거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③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조직을 환경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조직들이 협력하여 **환경을 능동적으로 형성·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회생태학에 근거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조직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로 본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동체생태학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조직들 사이의 상호의존과 협력에 주목한다. 조직들이 공동전략과 집단행동을 통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므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라는 설명을 능동적으로 환경을 형성·변화시키는 존재로 고쳐야 한다.

② O: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환경에서 얻기 때문에 자원 제공자에게 의존하고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조직은 이러한 의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직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적 활동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의 제약을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③ O: 조직군생태학이론은 개별 조직의 자유로운 적응보다 조직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환경의 선택을 중시한다. 조직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구조적 관성' 때문에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 살아남는 선택 과정이 조직군의 변화를 설명한다. 따라서 조직을 **환경의 선택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설명에 해당한다.

④ O: 전략적 선택이론은 환경·기술·규모 같은 상황요인만으로 조직구조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을 비판한다. 관리자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 자체를 선택하거나 바꾸려는 행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환경의 제약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판단과 선택**이 개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16.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지기이론은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청지기상을 강조한다.

② 인간모형으로 경제적 인간이 아닌 자아실현적 인간을 가정한다.

③ 파이너(H. Finer)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책임과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④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입각한 상호존중으로 인하여 이타적 가치가 생성된다고 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파이너가 강조한 객관적 책임과 외부통제는 청지기이론의 특징이 아니다. 청지기이론은 구성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신뢰하며 **주관적 책임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청지기이론은 심리학·사회학에 바탕을 두고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구성원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리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청지기로 이해한다.

② O: 청지기이론은 금전적 보상과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인간보다 **성장·성취·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간**을 가정한다.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만족을 얻으므로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 행동 요인이 된다.

③ X: 파이너는 공직자의 개인적 양심이나 책임감만으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선출된 대표 등에 대한 객관적 책임과 외부의 감독·제재를 강조했다. 그러나 청지기이론은 구성원의 전문성·내재적 동기·조직에 대한 헌신을 신뢰하므로 **주관적 책임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한다. 외부통제를 강조한 파이너의 관점을 청지기이론에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④ O: 청지기이론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대한 몰입과 자발적 협력이 촉진되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타적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지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17. 탈관료제적 조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골렘뷰스키(R. Golembiewski)는 조직 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압력이론(push theory)의 처방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니스(W. Bennis)는 문제중심 구조, 구조의 잠정성·유연성을 통한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구조설계의 처방으로 제시하였다.

③ 커크허트(L. Kirkhart)는 조직 간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통한 상황적응성을 강조하는 연합적 이념형을 주장하였다.

④ 테이어(F. Thayer)는 지배복종체제인 계서제의 완전한 타파를 강조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골렘뷰스키가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과 일 자체의 보람을 강조한 것은 **견인이론(pull theory)**이다. 압력이론(push theory)은 외부의 통제와 압력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접근이므로 두 이론의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골렘뷰스키는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에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보람과 만족을 얻도록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견인이론(pull theory)**을 제시하였다. 압력이론(push theory)은 통제와 압력을 통해 구성원이 불이익을 피하려고 일하게 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자발성과 직무 만족을 설명하면서 압력이론으로 연결한 부분을 견인이론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베니스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조직구조를 제시하였다. 문제와 환경이 달라지면 조직의 구성과 역할도 바꿀 수 있어야 하므로 **잠정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③ O: 커크허트의 연합적 이념형은 개인의 경력을 한 조직에 고정하지 않고 **조직 간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인정한다. 조직과의 고용관계를 잠정적인 것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 인력과 과업집단을 재구성함으로써 상황적응성을 높인다.

④ O: 테이어는 상급자가 지배하고 하급자가 복종하는 계서제 자체를 비판하며 **계서제의 완전한 타파**를 주장하였다. 단순히 계층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직적 지배·복종 관계를 없애고 구성원 간 수평적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지향한다.

NoteBase

문 18.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스키너(B. Skinner)는 외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능동적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조작적 조건화를 연구하였다.
㉡ 인간의 행동은 미래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강화된다고 본다.
㉢ 처벌(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특히 이전에 보상을 받아 강화된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바람직하지 않게 된 행동의 빈도를 줄이고자 긍정적 보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 회피(avoidance)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강화이론은 **과거 행동에 뒤따른 결과**가 이후 행동의 반복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전에 주던 보상을 중단하여 행동을 줄이는 것은 **소거**이고, 불쾌한 결과를 없애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것은 **회피(부정적 강화)**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강화이론은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를 통해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 O: 스키너는 유기체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작용한 뒤 그 행동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에 의해 학습하는 조작적 조건화를 연구하였다. 핵심은 단순한 반사반응이 아니라 **자발적 행동과 그 결과의 연결**이다.

㉡ X: 강화이론은 **과거 행동에 뒤따른 보상·불이익의 경험**이 이후 그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바꾼다고 본다. 미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는 인지적 접근과 구별되므로, 미래의 결과 예측을 강화의 근거로 삼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X: 이 보기에서 설명한 것은 **소거(소멸)**이다. 이전에 행동을 유지시키던 긍정적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그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문항의 구분에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 질책·벌점 등 불쾌한 결과를 주어 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 O: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한 자극이나 결과를 제거하거나 피하게 하여 그 행동을 더 자주 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강화**이다. 예를 들어 업무를 제때 수행할 때 상사의 질책을 피할 수 있다면, 제때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이 강화된다. 행동을 줄이는 처벌과 달리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린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과 ㉣이며, 이를 묶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켈리(R. Kelley)의 팔로워십(followershi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켈리는 '독립적·비판적인지, 의존적·무비판적인지'와 '수동적인지,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추종자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②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는 독립적·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③ 수동적 추종자(pass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고 조직의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다.

④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는 의존적·무비판적이지만 조직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효과적 추종자는 **독립적·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의존적·무비판적이지만 적극적'이라는 설명은 순응적 추종자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켈리는 추종자를 **사고의 독립성·비판성과 행동의 적극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 후자는 조직 활동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정도를 뜻한다.

② O: 소외적 추종자는 독립적·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조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③ O: 수동적 추종자는 **의존적·무비판적 사고와 수동적 행동**이 결합된 유형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기보다 리더의 판단과 지시에 의존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데 머문다.

④ X: 효과적 추종자는 **독립적·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의존적·무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은 순응적 추종자이므로, 효과적 추종자의 사고 특성을 잘못 설명했다.

NoteBase

문 20. 협상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적 협상(distributive bargaining)은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zero-sum) 협상이다.

② 통합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배분적 협상의 예로 판매자의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들 수 있다.

④ 통합적 협상은 당사자들에게 강한 유대감과 서로 승리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장기적인 인간관계에서 행해진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실적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는 기업의 성과와 판매자의 보상이 함께 커지도록 하므로 **통합적 협상**의 예이다. 정해진 이익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배분적 협상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배분적 협상은 **고정된 크기의 이익을 나누는** 협상이다. 한쪽의 몫이 늘어나면 다른 쪽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제로섬 구조이므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몫을 최대화하려 한다.

② O: 통합적 협상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다.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늘리거나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조정하여 상호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③ X: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판매자는 추가 보상을 얻고 기업은 실적 향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성과를 높여 양측의 이익을 함께 늘리는** 방식은 통합적 협상의 예이다. 배분적 협상의 예로는 거래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만 두고 흥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판매자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구매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④ O: 통합적 협상은 상대방의 이익도 고려하므로 양측이 모두 성과를 얻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호 만족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협상에 적합하다.

NoteBase

문 21.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봉사동기의 구성개념은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② 합리적 차원은 '공공정책에 대한 매력'으로,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③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대한 기여'로, 공익 실현을 위하여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④ 공·사 부문 종사자들이 동일한 가치 및 욕구 체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공봉사동기 이론은 공·사 부문 종사자의 가치·욕구 체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공익에 대한 헌신과 봉사 의식 등 공공부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에 주목한다.

선지별 해설

공공봉사동기는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에 봉사하려는 동기이며, 공공부문 종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① O: 공공봉사동기의 이론적 기반은 **합리적·규범적·감성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합리적 차원은 개인의 효용과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 규범적 차원은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감성적 차원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 등 정서적 반응에 기초한다.

② O: 합리적 차원의 '공공정책에 대한 매력'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나 관심을 실현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동기이다. 공직자가 **정책 참여를 자신의 효용을 높이는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효용은 금전적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③ O: 규범적 차원의 '공익에 대한 기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기초한다. 개인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규범**에 따라 노력하려는 동기이다.

④ X: 공공봉사동기 이론은 공·사 부문 종사자의 가치와 욕구 체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공익에 대한 헌신,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공·사 부문의 동기와 가치 지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고쳐야 한다. 이는 모든 공직자가 같은 동기를 갖거나 민간부문 종사자에게는 공공봉사동기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2. 엽관주의(spoils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적 인사제도는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②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어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한다.

③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 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④ 정부 관료제의 정치적 대응성을 높이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엽관주의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대량 교체될 수 있어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된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교체를 억제하고 능력·실적에 따라 인사하는 것은 실적주의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정치적 공헌을 주요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① O: 소수 특권층의 공직 독점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의 공직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선거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관료를 임용함으로써 관료제를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연결하는 기능도 한다.

② O: 집권정치인들은 자신과 소속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므로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얻기 쉽다. 이러한 **정치적 충성에 기초한 인사**는 관료에 대한 집권세력의 통제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③ X: 엽관주의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존 공무원이 물러나고 새 집권세력의 지지자가 임용되는 **대량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무 경험의 축적이 어려워지고 행정의 계속성·전문성이 저해된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교체를 억제하고 능력·실적을 중시하여 계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실적주의의 장점이다.

④ O: 집권정당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면 선거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기 쉬워 **정치적 대응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당 활동에 대한 공직 임용의 보상은 당원들의 참여와 충성을 유도하여 정당조직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23.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노동력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과정이다.

②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사고의 차이 등이 극복되기 쉬우므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③ 표면적 차원의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직 내 차별행위가 발생하면서 생산성의 저하, 첨예한 갈등 및 이직률 증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기 쉽다.

④ 기존의 다양성 관리가 표면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 다양성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다고 성격·가치관·사고의 차이가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는다.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야 하므로 **다양성 관리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양성 관리는 구성원의 내적·외적 차이를 인정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과정이다. 채용·배치·평가·보상 등에서 차별을 줄이고 다양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므로 **공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② X: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져도 성격·가치관·사고의 차이가 자동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과 행동 방식이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성 관리가 더욱 필요해진다**. 다양성의 증대가 관리 필요성의 소멸을 뜻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③ O: 성별·연령·인종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과 신뢰가 약해지고 업무 의욕과 협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생산성 저하·갈등 심화·이직률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면적 다양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④ O: 표면적 다양성은 성별·연령·인종처럼 쉽게 드러나는 차이이며, 내면적 다양성은 가치관·태도·성격 등 쉽게 관찰되지 않는 차이이다. 내면적 차이도 조직생활에서의 만족과 갈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성 관리의 범위를 외형적 차이에 대한 차별 방지에서 **내면적 차이와 요구의 존중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NoteBase

문 24.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공개경쟁채용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및 능력 중심의 실적제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야 한다.

정답 4번

①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직무 관련 전문지식·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②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므로 **공개경쟁채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쉽게 한다**.

③

응시 대상을 일정한 경력·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므로 **공직 진입의 기회균등이 약화될 수 있다**. 선발 과정에 정실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면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도 훼손될 수 있다**.

NoteBase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②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NoteBase

문 25.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 방법은 장소에 따라 직장훈련(OJT: On-the-Job Training)과 직장외훈련(Off JT: Off-the-Job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OJT의 경우 교육훈련이 실제적이고, 교육훈련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Off JT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OJT의 경우 교육훈련의 수준이나 내용 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칫 일과 교육훈련 모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OJT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므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다수 인원의 동시 교육**은 별도의 교육장에 대상자를 모아 실시하는 **Off JT의 장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OJT와 Off JT를 구분한다. OJT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일을 수행하면서** 상사나 선임자의 지도를 받는 훈련이고, Off JT는 업무 현장을 벗어나 별도의 교육장이나 훈련기관에서 받는 훈련이다.

② X: OJT는 실제 업무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므로 실무와 밀접하고,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기존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별도의 교육장이나 외부 강사 등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사나 선임자가 업무 상황과 개인의 숙련도에 맞추어 지도하므로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대상자에게 공통된 내용을 한꺼번에 교육하기에 적합한 방식은 집합교육으로 운영하는 Off JT이다.

③ O: Off JT는 일상 업무와 분리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므로 업무 처리로 인한 방해나 중단을 줄일 수 있다. 교육생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에 집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④ O: OJT는 지도자의 지식과 교수 능력, 부서의 업무 여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 내용과 수준을 통일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 수행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배분하지 못하면 업무 처리와 교육훈련 모두 소홀해질 수 있다.

NoteBase

문 26. 순환보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工형 보직경로' 때문에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반행정가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잦은 순환보직은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④ 공무원의 통합적인 시각을 증진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잦은 순환보직의 문제는 전문분야와 무관하게 여러 보직을 거치는 **Z형 보직경로**와 관련된다. 工형 보직경로는 초기의 다양한 직무 경험과 **중간 단계의 전문성 축적**, 고위 단계의 종합적 관리능력을 결합한다.

선지별 해설

순환보직은 공무원을 여러 직무나 부서에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인사관리 방식이다.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이 지나치게 잦으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① X: 우리나라에서 잦은 순환보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Z형 보직경로**이다. 工형은 하위직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뒤, 고위직에서 넓은 시야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경로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단계를 둔 工형을 잦은 순환보직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② O: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면 행정 전반에 관한 지식과 관리능력을 넓힐 수 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에 집중하는 전문행정가보다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O: 담당자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자주 바뀌면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 후임자의 업무 숙지와 인수인계에 드는 비용도 커져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④ O: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점을 경험하면 자기 부서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쉽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은 여러 부서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27.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② 「공직자윤리법」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이다.

③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없다.

정답 4번

①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와 영향력이 사적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익·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 시 본인과 이해관계자는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으면 매각·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 · 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2025.10.1>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NoteBase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NoteBase

④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 매각·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주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 · 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2025.10.1>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28.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한다.

② 제도 도입 이후 종전의 예산과목 체계에서 '장-관-항'이 기능별 분류로, '세항-세세항-목'이 사업별 분류로 단순화되었다.

③ 투입관리와 통제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8년에 중앙정부로 확대되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이 묶음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성과를 관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 아래 추진되는 여러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개별 지출 품목보다 **정책목표와 사업의 연결**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화하므로, 어떤 목표에 얼마를 배분하고 어떤 성과를 얻는지 파악하기 쉽다.

② X: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정부 기능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분야-부문'이며, 그 아래에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을 둔다. '장-관-항'과 '세항-세세항-목'을 각각 기능별·사업별 분류로 단순화한 것이 아니다. 특히 **목·세목은 지출의 성질별 분류**이므로 사업의 계층과 구별해야 한다.

③ X: 투입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④ X: 중앙정부는 **2007년**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도입한 뒤 2008년에 중앙정부로 확대하였다는 설명은 도입 주체와 시기를 잘못 연결한 것이다.

NoteBase

문 29. 분산조달에 대비되는 집중조달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매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② 부패나 부당거래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③ 대량 공급이 가능한 공급업자에게 유리하다.

④ 적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여 각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각 수요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매하는 것은 **분산조달의 장점**이다. 집중조달은 여러 기관의 수요를 모아 구매하므로 개별 기관의 긴급한 수요나 특수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집중조달은 중앙의 전담 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구매를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고, 분산조달은 각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① O: 구매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력과 업무가 모이면 시장조사, 규격 검토, 계약 등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다. 이를 통해 **구매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② O: 여러 기관에 흩어진 구매업무를 집중하면 공통 기준에 따라 계약과 집행을 감독하기 쉽다. 구매 절차와 거래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통제**가 가능하므로 부패나 부당거래를 통제하는 데 유리하다.

③ O: 여러 수요기관의 구매량이 합쳐지면 계약 규모가 커지므로 **대량 납품능력을 갖춘 공급업자**에게 유리하다. 이는 해당 공급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뜻이며, 소규모 공급업자에게도 똑같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각 수요기관이 필요한 시기와 품목을 직접 판단하여 구매하는 **분산조달**은 적시성과 개별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다. 집중조달에서는 수요 취합과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므로 각 기관의 긴급하거나 특수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NoteBase

문 30. 중앙정부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입에서는 추정액과 실제 징수액이 다를 수 있지만, 지출에서는 예산과 결산이 항상 일치한다.

② 국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종료된다.

③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지출의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④ 세계잉여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지출에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과 실제 지출을 집계한 결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결산은 **대통령 승인 → 감사원 검사 → 국회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의 승인은 국회 의결에 앞서 이루어지며, 국회의 의결로 결산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결산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지출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변상·징계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계잉여금은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법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문 31. 우리나라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상 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④ 전통적 회계검사에서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하나, 성과감사에서는 지출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정답 3번

①

감사원이 확인하는 것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이다. 이를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므로, 결산 확인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대한민국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NoteBase

②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다. 또한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가) 헌법은 피청구인을 '제4장 정부' 중 '제2절 행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다.
…
결국 현행 헌법상 피청구인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조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운영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비위를 척결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기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된 직무감찰기관이 수행하던 기능이 제5차 개정헌법을 통해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됨에 따라 헌법기능으로 격상되어 헌법 제97조의 직무감찰 대상 범위 등의 내용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3헌라5 전원재판부)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전통적 회계검사는 **지출의 합법성**을, 성과감사는 **지출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중시한다. 선지는 두 감사의 중점을 뒤바꾸었다.

NoteBase

문 3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한 재정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

② 민간의 유휴자금을 공공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

③ 시장경쟁에 익숙한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에 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하다.

④ BTL(Build-Transfer-Lease)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적용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사용료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과거 일부 BTO 사업에 적용된 제도로, **BT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기반시설은 건설 당시의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이용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시설 사용료나 정부의 임대료 지급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면, **시설의 편익을 누리는 기간에 걸쳐 비용을 분담**하여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② O: 민간투자사업은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의 자금을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투자처를 찾는 **민간의 유휴자금을 공공시설 투자로 연결**하여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투자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

③ O: 민간기업의 건설 기술과 사업관리 경험을 활용하고 경쟁을 유도하면 공법 개선,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민간사업이 언제나 정부사업보다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④ X: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정부가 이를 임차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실제 이용자 사용료 수입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과거 일부 BTO 사업에 적용되었다. BTL의 임대료 지급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입 보전과 구별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모든 BTO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다.

NoteBase

문 33. 예산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메이어와 윌로비(K. Thurmaier & K. Willoughby)의 다중 합리성모형은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② 총체주의(synopticism)는 해결할 문제나 달성할 목표가 명백히 주어져 있는 것을 가정한다.

③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사후적인 분석으로는 적절하지만, 단절적 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④ 루빈(I.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은 세출 흐름에서 책임성의 정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세출 흐름은 어떤 사업과 대상에 재원을 배분할지를 정하는 **선택의 정치**이다.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와 변경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다루는 **책임성의 정치는 예산집행 흐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메이어와 윌로비의 다중 합리성모형은 예산결정을 하나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예산과정의 단계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 이용하는 정보, 의사결정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 합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O: 총체주의는 해결할 문제와 달성할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목표를 먼저 명확히 설정**한 뒤 가능한 대안과 그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이다.

③ O: 단절균형이론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안정적·점증적 변화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하고 큰 변화를 함께 설명한다. 이미 발생한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관심의 이동과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급격한 변화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④ X: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세출 흐름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떤 사업에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정치**이다. 반면 **책임성의 정치는 예산집행 흐름**의 특징으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하는지와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일탈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를 다룬다. 세출 흐름과 예산집행 흐름의 정치적 특징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NoteBase

문 34. 예산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가능하다.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또는 목 사이에서 예산을 융통하는 것이지만,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그 장관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NoteBase

ㄴ

정부조직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이 변동하여 예산의 책임소관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이체**이다. 전용은 **세항 또는 목 사이의 금액을 융통**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 · 이체)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ㄷ

전용은 정해진 세항 또는 목 사이에서 예산을 융통할 수 있게 하므로 **예산의 목적상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NoteBase

㉣

전용 승인 및 명세서 송부의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승인한 때에는 전용명세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

전용은 **국회의 별도 사전 의결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이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0.6.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NoteBase

문 35.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②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③ ‘민원24’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축되었다.

④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1번가’라는 시민참여포털을 구축하여 정책 제안의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정답 3번

①

전자정부는 정보기술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기관 간 행정업무와 대국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②

2010년 UN 전자정부 조사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0.8785로 세계 1위**였으며, 미국 0.8510, 캐나다 0.8448보다 높았다. 선지가 말하는 1위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발표된 이 국가별 지수 순위에 해당한다.

③

민원24의 전신인 G4C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에 개통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민원24’로 개편·개칭**되었다.

④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민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개설하여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NoteBase

문 36. 빅데이터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빅데이터에 포함된다.

② 전통적인 데이터 개념과 다른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크기(volume), 타당성(validity), 속도(velocity)이다.

③ 빅데이터의 특징 중 속도(velocity)란 데이터 처리를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④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빅데이터의 기본 3V는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이다. 기본 3V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성(validity)이 아니라 다양성(variety)**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빅데이터에는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표와 항목에 맞추어 저장된 자료이고, 반정형 데이터는 XML·JSON처럼 일정한 구조를 표현하는 자료이다. 비정형 데이터는 자유로운 형태의 글·사진·동영상처럼 고정된 표 구조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② X: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3V는 데이터의 양을 뜻하는 크기(volume), 데이터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variety), 데이터가 생성·유입되고 처리되는 속도(velocity)이다. 선지의 타당성(validity)은 이 기본 3V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다양성(variety)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속도(velocity)는 데이터의 생성·유입과 처리의 빠르기에 관한 특징이다. 빠르게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처리**해야 하므로, 목적에 따라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추어 처리한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④ O: 기초자치단체인 의왕시는 2017년에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활용 기반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7.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목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② 효과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증거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현 정부는 ‘공동생산형 → 참여형 → 행정서비스형 → 행정정보화형’의 순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④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침해 등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통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전산화에서 출발하여 서비스 제공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산형**으로 발전한다. 제시된 순서는 이러한 발전 방향을 **거꾸로 배열**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험 당시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부이다.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의 역량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협력하는 것을 지향한다.

② O: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고, 증거기반 의사결정은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목적도 **분석 근거에 따른 정책결정**과 서비스 개선에 있으므로 두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X: 발전 방향은 **행정정보화형 → 행정서비스형 → 참여형 → 공동생산형**이다. 행정정보화형은 정부 내부 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형은 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참여형에서는 국민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며, 공동생산형에서는 국민·기업·정부가 서비스 생산과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러한 협력과 공동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이므로, 공동생산형에서 행정정보화형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은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④ O: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어도 기기·통신망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부 국민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한 이용의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누구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 순서를 거꾸로 제시한 ③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3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평가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대적 재정규모를 평가하지 못한다.

②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원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③ 지방재정력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자기 관할 구역 내의 과세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능력으로 정의된다.

④ 재정력지수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더한 재원의 비율이다.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교부세를 빠뜨린** 설명은 재정자주도의 산정 범위와 구성 항목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원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므로 그 값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규모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같더라도 세입 총액과 자체수입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② X: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자체수입뿐 아니라 외부에서 이전받은 재원 중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포함하여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파악한다. 따라서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은 부분을 일반회계로 고치고, 누락된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야 한다.

③ O: 지방재정력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역 내부의 과세기반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주민의 소득·재산 등 지역의 과세기반에 바탕을 둔 조세부담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실제 예산에 계상된 수입액이나 재정자립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④ O: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이다.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 주므로 보통교부세의 교부 대상과 재정부족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NoteBase

문 39.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율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정답 2번

①

지방세 세율 감면은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3의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는 사항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NoteBase

③

동일하거나 취지가 같은 사항은 **주민투표 실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④

사용료의 부과 또는 감면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3의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40.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처리 또는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보다 둔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살려 복잡한 행정문제를 보다 효율적·광역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특정한 목적이나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지역의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관할구역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주민보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해 통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이 약하므로, 지역의 요구와 특수성에 대한 대응이 둔감해질 수 있다.

③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특성에 맞는 관할구역**을 설정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문제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④ O: 같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지휘·감독 계통에 따라 활동하므로, **업무와 감독이 중복**되거나 기관 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중행정·이중감독, 책임소재의 불명확, 지방행정의 종합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